

정책연구 2012-24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평가지표 설정 연구

2012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과 재정지원의 필요성	7
제1절 비영리단체의 개념	9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재정지원 필요성과 정당성 근거	11
제3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평가 현황	13
제1절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필요성	15
1. 국민운동단체 재정지원 사업 현황	15
2.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평가 필요성	17
제2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평가 현황	20
1. 총괄 평가	24
2.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	26
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업	28
4.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30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현황 34

1. 행정안전부 검토안 34
2. 선행연구(서울시 적용)의 평가지표 37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지표 39
4. 자치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성과평가지표 43

제4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45

제1절 평가의 논리와 기본방향 47

1. 평가 논리 47
2. 지표구성 논리 49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평가지표 구성(안) 51

1. 평가지표 개요 51
2. 평가지표 구성 및 내용 54

제3절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7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73

〈부록〉 국민운동단체의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추진사업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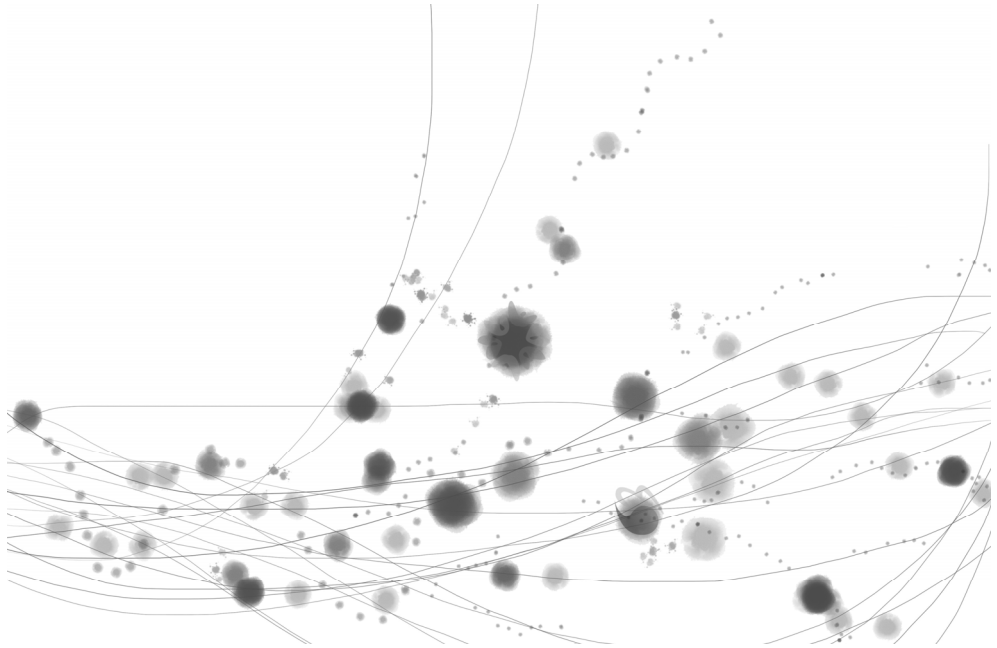
표 차례

<표 3-1> 국민운동단체 일반 현황	16
<표 3-2> 국민운동단체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
<표 3-3> 국민운동단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3
<표 3-4> 행정안전부 1안(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35
<표 3-5> 행정안전부 2안(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36
<표 3-6> 기존모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지표	38
<표 3-7>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와 특징	41
<표 3-8>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구분	42
<표 3-9>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43
<표 3-10>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성과 평가지표	44
<표 4-1> 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53
<표 4-2> 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세부지표(수정안)	6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임
- 최근 보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보조금의 억제 및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동시에 2011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운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며, 보조 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칫 보조금 사업이 이해관계자의 나눠 먹기식 예산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보조금사업 관리의 책임성이 미흡하여 중앙정부(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총 8개 평가기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평가기준	
1.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③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2.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① 2012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한편,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정부개혁은 그 동안 당연시 되어오던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다양한 공공기능을 사회와 시장에 넘김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소위 거버넌스로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정부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임
 - 이들 국민운동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단체가 시민사회 주체의 하나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임
- 특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동사업 운영의 성과,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즉,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기관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 여부 확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국고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한 공익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연구대상
 - 행안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국민운동단체 : 3개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내용 범위
 -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 사업운영의 계획, 집행, 성과 등 사업별 공통평가지표 개발 : 국민운동단체의 역량, 사업운영 과정, 사업성과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
 -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및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등을 반영
 -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의 적정성 및 집행의 적정·투명성 확보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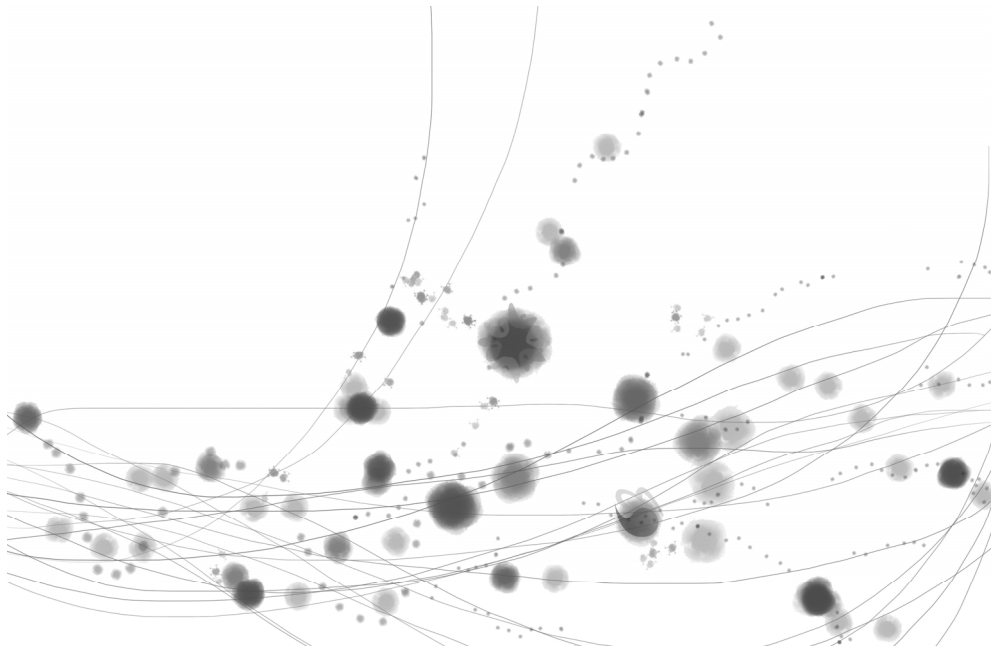
- 문헌조사
- 실태분석
- 관계자 면담
- 사례조사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과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1절 비영리단체의 개념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재정지원 필요성과 정당성 근거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과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1절 비영리단체의 개념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최근 1년간 공익 활동실적이 있으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최근 양적으로나 영향력이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를 대체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향후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론적으로 볼 때, 기업과 정부가 각각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문,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에 국한되고 있음

- 즉,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정부의 규모, 예산 등이 무한 증대될 수 없는 현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존립 근거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음. 이는 정부가 일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업무수행을 보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정부가 하는 일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점을 보이지만, 정부가 하는 일의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음
-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다양한 조직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임
- 열거된 명칭이 암시하듯 비영리민간단체는 유형도 다양하며, 수행하는 업무, 역할도 다양함. 즉, 순수하게 공공부문을 보완하는 단체에서부터 공식적 기구인 정부에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민간단체를 묶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명명하고 2001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행해오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운용, 집행 등에 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재정지원 필요성과 정당성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특히 행정안전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여부와 관련한 긍정적·부정적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국민운동단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은 국민운동단체 존재의 핵심적 특징인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과정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정부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음
 - 특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록 정부에 종속되어 관변단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수혜는 사회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며,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정부와 친화력이 있는 단체로 낙인찍히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됨

- 둘째, 단체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류작업이나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급급하게 되어 시민들의 요구와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동성이 사라지게 됨
- 셋째, 공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체제의 형성은 사회단체 간 상호 협력과 연대하여 공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함
 - 시민사회의 영역과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의 양이 적어진다는 인식
-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에 대한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장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함
 - 첫째, 정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공급되지 않은 서비스나 공적 문제 해소에 사회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민현정, 2004)
 - 둘째, 자원부문실패이론(Salamon, 1995)으로 정부의 과정과 절차 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단체들이 해결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임
 - 셋째, 국가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지역주민생활 단위에 익숙한 국민운동단체가 단체별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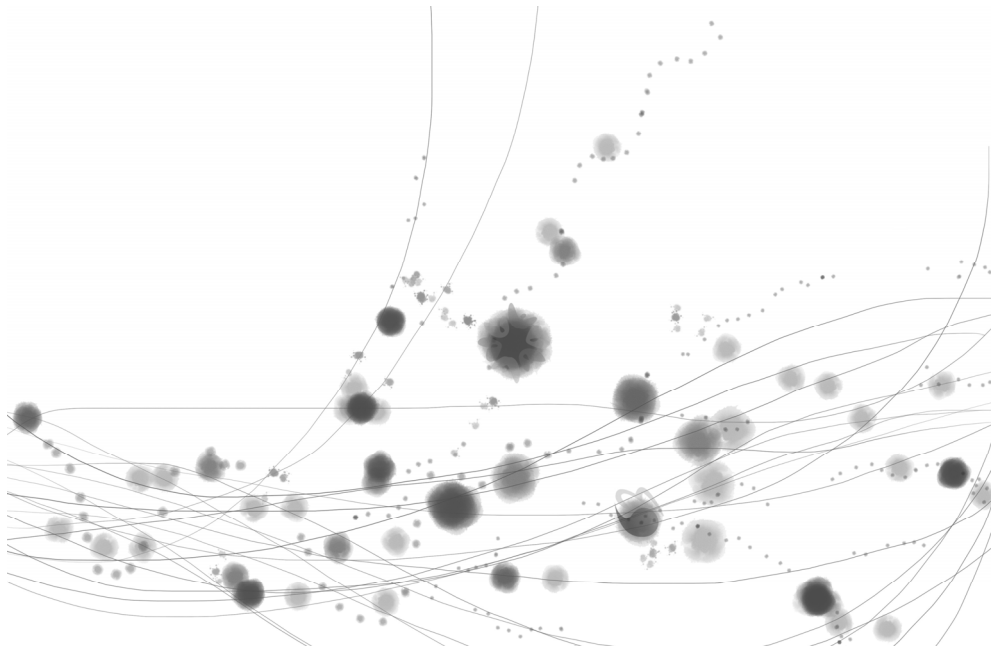
제 3 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평가 현황

제1절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필요성

제2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평가 현황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현황



제 3 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평가 현황

제1절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필요성

1. 국민운동단체 재정지원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요성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중요 구성원이라는 접근 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정부개혁은 그동안 당연히 되어오던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다양한 공공기능을 사회와 시장에 넘김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소위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우리나라 정부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법 등 10여개 의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 문화관광부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등 6개 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2개,
 - 행정안전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200개 이상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원되고, 이밖에 정액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개별보조금 등의 형태로 사회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쉽지 않음(기획재정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2011)

-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현황¹⁾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부록 참조)

<표 3-1> 국민운동단체 일반 현황

구분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70.4.22) (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설립('80.12.1)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명칭 변경(200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르게살기운동중앙 협의회 창립('89.4.1) 사단법인 설립('97.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반공연맹설립('54.6.15) 한국반공연맹설립('64.1.15) 한국자유총연맹 설립('89.2.10) 소관부처 변경('99.5.24) -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80.12.13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91.12.3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89.3.31 제정)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대 회장 이재창(65세, 前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대 회장 최효석(63세, 前경남지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대 회장 박창달(65세, 前국회의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회, 연수원 17개 시도지부(이북5도 포함) 232개 시군구 지회(제주2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회 17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지회(제주2 포함, 창원시 아래 5개지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회 16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제주2 포함, 울산 북구·충남 계룡 미 구성)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수 207만명(지도자 18, 회원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수 62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수 150만명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코리아운동 - 녹색생활 실천 스마트코리아운동 - 나라 품격 높이기 해피코리아운동 - 다문화가정 돕기 글로벌코리아운동 - 새마을운동 국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 시민의식 교육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 - 부정이미지 발굴및시정 가정사랑 실천 확산 - 바른 가정 만들기 세미나 개최 바른사회 만들기 - 법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민주가치 구현 - 자유확산,헌법질서 수호 선진국민의식 선도 - 민주시민교육 국민통합운동 - 소외계층·탈북자 보호 국제교류 협력 - ECOSOC NGO활동등
'12년 예산(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백만원

1) 본연구의 대상인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의 기본 현황과 2011년도 추진사업은 부록 참조

2.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평가 필요성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함(정운수 2000, 549)
 - 일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종의 지원금 이므로 여타 다른 정부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평가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함
 -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즉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일부에서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의 일부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 획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선의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 즉, 인건비 등 경상비까지 거액을 지원받는 단체²⁾와 소규모의 사업에 산만 지원받는 단체는 평가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정치활동형(Voice Type)단체와 공익성 서비스 전달을 주로 하는 단체와는 차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 이러한 주장 모두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³⁾

2)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던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본 연구에서는 정치활동형 민간단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모형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일부, 즉 “사업성과의 수준과 범위”라는 지표에서 사업의 내용적 성격을 세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음. 다만, 정보공개청구나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 결과에 의해 일부가 밝혀졌을 뿐임.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28억원 이상이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⁴⁾
 - 둘째,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 행정안전부가 전국단위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별 신청과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2:1의 경쟁률에 이르고 있고 시·도가 국비를 받아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7:1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7조2항), 지원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동법령은 국가 이외의 주체가 행하는 모든 사무 또는 정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정부는 대부분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개별법령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1년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시행령 제8조 제1항). 따라서 법에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매년 계속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익년도 지원사업 선정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함

- 넷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의 평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미흡할 수 있지만 평가작업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평가 작업은 필수적이라는 것임. 특히, 평가작업을 통해 사업지원기관 즉 정부와 수행기관인 비영리민간단체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정운수, 549)
- 다섯째,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개별 사업의 성과제고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제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첫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유사 비영리민간단체단체들을 도태시킬 수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순수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도덕성 문제의 일단도 해결할 수 있음. 두 번째는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단체의 사업추진과정과 능력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단체 자체의 사업추진능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음(이희태 2002, 21)

제2절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평가 현황('12년 중간평가 결과)

- 행정안전부가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관리하는 규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행정안전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재정지원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음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다양하고 규모, 지원 받는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체를 평가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재정지원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심의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약정대로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로 회계평가(evaluation by financial documents)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 최근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평가 역시 회계평가에 집중되고 있음
 - 회계평가는 가장 소극적 의미에서 수행되는 평가임
 - 만약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평가가 회계평가로 축소된다면 애당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예산을 법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역할을 대행해주는 동반자로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수행 능력 전반에 걸친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지표는 단순 회계검사(audit) 수준을 넘어서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업무를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역량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 동시에 평가결과는 향후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정할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것임
- 현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지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지역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대표적임
- 특히, 행정안전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2> 국민운동단체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백만원)

단체명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예산
총 계(19개사업)			2,800
○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			1,500
1. 새마을운동중앙회(4)			500
	그린코리아 녹색생활 실천(4)		500
		저탄소녹색생활실천활동	240
		자원다시모으기 경진대회	135
		녹색생활리더육성	20
		녹색생활의식교육	105
2.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6)			1,000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3)		700
		새운리도덕함양시민교육	500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100
		초중고 ‘바른생활학생봉사단’ 조직 운영	100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1)		100
		국외여행에티켓 홍보	100
	가정사랑 실천 확산(2)		200
		가정사랑실천시민참여종합문화제	160
		전국모범가정발굴, 시상 및 사례전파 활동	40
○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1,300
3. 한국자유총연맹(9개)			1,300
	자유민주시민 의식 함양(3개)		600
		전국청소년민주시민교육운영	210
		전국청소년자유민주의식토론대회	40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운영	350
	따뜻한 자유 구현(6개)		700
		애국심고취사업	150
		내고장 ‘Hero Korean’(애국영웅) 찾기	100
		무궁화알리기 및 체험사업	130
		청소년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50
		동네행복 및 안전지킴이 운영	170
		나라사랑 평화나눔대학생 DMZ대장정	100

<표 3-3> 국민운동단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명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12예산
		총계(18개사업)	2,800
○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1,500
1. 새마을운동중앙회(4개)			500
	그린코리아녹색생활실천(4)		500
		저탄소녹색생활실천캠페인	240
		자원다시모으기경진대회	110
		녹색생활리더육성	40
		녹색생활의식교육	110
2.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6)			1,000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4)		800
		새윤리도덕 함양 시민교육	370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100
		'바른생활학생봉사단' 조직 운영	200
		글로벌 한국 이미지 공모전 및 전시회	100
	가정사랑 실천 확산(2)		200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 문화제	150
		전국모범가정발굴, 시상및사례전파활동	80
○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			1,300
3. 한국자유총연맹(8)			1,300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4)		700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운영	200
		전국 청소년 자유민주의식 토론대회	50
		청소년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100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	350
	따뜻한 자유구현(4)		600
		애국심 고취사업	160
		대학생 지식봉사 활동	70
		동네행복 지킴이운영	240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대장정	130

-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3개 국민운동단체의 18개 사업별로 2012년 중간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총괄 평가

(1) 사업분야 개발

- 그동안 축적된 Know-How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단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캠페인, 시민교육,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환경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사업 영역 개발이 필요함
 - 일부 신규 사업은 사전계획이 부족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등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전례·답습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과 추진전략이 필요
 - 각종 캠페인 및 토론회, 분야별 시민의식전환 교육, 사진 공모전 등

(2) 사업의 추진방식

- 사업추진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
 - 에너지 절약 및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윤리의식개혁 시민교육 등
- 사업추진이 특정기간에 단절되거나 집중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 되는 국민운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조사 및 자료 분석을 거쳐 사업준비 철저 필요
 -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교부결정이 2월중에 결정하여 교부금이 1/4분기 3월, 2/4분기 5월중 결정되고 있고 금년의 경우 총선일정과 상반기 평가일정 등으로 3/4분기 교부금이 9월이 지급되는 등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음

-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전원 교체로 인해 업무파악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었음

(3)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집행에 따른 회계처리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자부담 부담비율이 낮고 사업간 부담비율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 회계처리상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 부족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
 - 행사성 경비의 외부 위탁, 지출결의 누락, 중앙화·시도지회 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지회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
 -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업은 보완 후 재평가,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통보해야 하고, 미흡한 회계증빙자료를 예산 결산 시까지 보완하지 못 할 경우 사업비 회수 필요
 -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중앙-지부-지회로 연결 지원되는 구조인 관계로 중앙에서는 사업비를 지방에 온라인 계좌로 입금시킨 시점을 집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증빙자료 징구가 차이가 발생함
 - 반대로 사업은 모두 추진했는데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예산목이 지원금 항목이 아닌 직접 집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와 사업추진과정(계획수립, 봉사자모집, 교육 등)까지를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전체적인 진척율을 중간평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미흡한 사업으로 지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2.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그린코리아 녹색생활 실천)

(1) 사업 1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동('12년 240백만원)

-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
- 고유가극복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은 방법론 측면에서 지난해와 다소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며, 전기 털 쓰기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광장에서 독특한 퍼포먼스 진행, 대중적 파급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
 - 빈도 높을수록 효과 제고되는 캠페인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과가 우수하고 조직역량을 잘 활용하여 단체 성격을 잘 살린 사업으로 평가
- 고유가극복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은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대의 흐름이나 시민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캠페인 방법이나 전략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일회성사업 예산 투입을 줄이고 연중 지속사업에 예산배정이 필요
 - 자부담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불인정 처리건수가 다수 발생(격려금 지급 등)

(2) 사업 2 : 3R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12년 110백만원)

-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Reduce(발생 줄이기)의 전국적 경진대회 통해 국민적 관심유도 및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
- 여러 지회·지부에서 활발히 사업 추진하여 상당한 실적과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 '12년도에는 전년도 참여 105개소와 비교, 250개소가 참여하여 지역별 참가가 더욱 활발하여 사업 성격과 진행방식 또한 단체의 역량과 특성을 잘 살리고 있음

- 수익금의 불우이웃돕기 사용내역 등 사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 각 지부별 자원 다시 모으기 수익금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의 증빙 서류와 성과 점검이 필요

(3) 사업 3 : 녹색생활 리더 육성('12년 40백만원)

- 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등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의 리더 역할을 수행케 하는 사업
- 대학생과 새마을 청년조직(Y-SMU : Young SaeMaul)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업 4 : 녹색생활 의식교육('12년 110백만원)

-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등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의 리더 역할을 수행케 하는 사업
- 녹색생활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는 하나 내년도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는 테마인지는 미지수임
 - 강사 워크숍은 4개 권역으로 구분, 총 18명의 강사를 양성했으며, 선정부터 2박3일의 교육, 수료 후 소감 및 제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
 - 권역별로 유능한 강사 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교육 참석자에 대한 설문만족도조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업

(1) 사업 1 :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12년 700백만원)

- 새 윤리도덕 함양 시민교육('12년 370백만원)
 - 선진 시민사회의 규범과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 및 선진시민사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사업
 - 시민교육 대상의 계획 인원(7,800명)이 다수이므로 월별로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교육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식비 지출관련, 집행지침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증빙자료 구비 미흡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12년 100백만원)
 - 올바른 사이버문화 정립 및 질서의식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환경 개선, 공모전 등을 통해 네티즌 관심을 적극 유도하는 사업
 - 전년도 비교하여 대학생기자단 중심으로 사이트 운영 예정 등 사업 성격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
 - 전년부터 관련 사이트(바른사이버연합) 운영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사업 시작되어 상반기 사이트 활동이 미미하므로 상반기부터 월별 계획에 따라 연중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조직 운영('12년 200백만원)
 - 수도권지역 초등학교에 봉사단을 조직하고 자발적 봉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규율과 가치관 성장을 독려하는 사업
 - 이동기부터 지역사회에 관심과 봉사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단체의 기능과도 부합하며, 전년(25개교, 800명)에 비해 대상(32개교, 1,050명)을 확대하고 봉사일지 등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발대식 등에 많은 예산투입하고 있으나, 본사업의 핵심인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사에 사업 일괄 발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2 : 글로벌 한국이미지 공모전 및 전시회('12년 100백만원)

- 대한민국 모습을 통해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 및 글로벌국가이미지 정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대한민국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
- 인쇄부문(91), TV스토리부문(29) 등 총120개 작품 응모 및 청계천, 여수 등 수도권지방 전시로 관람객 약 95,000명의 높은 성과
 - 사업 추진방식을 변화하여 수준높은 작품을 응모하도록 했으며, 유동인구 많은 곳 전시로 전년(87,300명)보다 많은 인원 관람
 - 다만, 전년도(8곳)보다 전시지역 수가 줄어 많은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는 다소 미흡
- 관람인원은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김포보다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알리기에 더 적절한 장소이므로 내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모전과 전시회 비용을 외부기관에 일괄 지출하는 식의 재하청방식 지양
 -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 공공기관과의 연계 필요
 - 국외여행에티켓 홍보가 본 단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 재검토 필요

(3) 사업 3 : 가정사랑 실천 확산('12년 200백만원)

- 가정사랑실천 시민참여 종합문화제('12년 150백만원)
 - 행복하고 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도협의회 대상으로 공모,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 공통된 주제 하에 지역별 특화사업을 실시, 시도협의회별 역량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독창성을 잘 살리고 있음
 - 다만,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타 부처, 타 단체 등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중복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재검토가 필요하고, 각 지역별로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모범가정 발굴, 시상 및 사례 전파 활동('12년 80백만원)
 -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 모범가정 사례를 전국적으로 추천·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관련 자료집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사례집보다 기존 대형 언론사와 공동작업을 할 경우, 홍보 극대화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하므로 내년에는 언론사와 공동작업 검토 및 바람직 기획사 일괄 발주가 바람직한지에 재검토 필요

4.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1) 사업 1 :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12년 700백만원)

-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12년 200백만원)

- 청소년에게 자유민주주의 이해와 올바른 안보·통일관 배양 및 지역사회 지도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 전문 강사진들에 대한 교육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민교육 운영이 핵심이므로 워크숍 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자유포커스 발간, 민주시민교실 운영에 있어 상·하반기 발간과 교육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실행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전국 청소년 자유 민주의식 토론회('12년 50백만원)
-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대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모색하는 사업
 - 조직 역량을 잘 살린 사업으로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사회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상대방 설득능력 향상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매년 지속하는 단체 대표적 사업이므로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지부별 사업 추진의 경우 사업비 집행 및 성과 점검의 철저화가 요구됨
-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함양 캠페인('12년 100백만원)
-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고양 및 준법의식수호 캠페인 전개를 통해 자신의 의무를 성실 이행 및 권리 실현을 할 줄 아는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인 사업
 - 금년 하반기에 노트와 형광펜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아동성범죄 사건발생에 따른 '아동성범죄예방수칙' 전단지 제작 캠페인을 통해 배부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있음
 - 홍보물이 현수막에 그쳐 다양한 홍보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12년 350백만원)
-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안보전문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업

- 전년도 시작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기자단 모집은 예정대로 추진되었으며, 연수 및 활동도 원활히 추진됨
- 사이버 테러방지 아카데미는 목적에 맞게끔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대학생 기자단이 중심이 되어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자금 및 기자재 지원 등 대학생 활동 중심의 사업 추진이 요망됨
- 애니메이션 제작은 '11년 종료된 사업이므로 실행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2) 사업 2 : 따뜻한 자유 구현('12년 600백만원)

○ 애국심 고취사업('12년 160백만원)

- 우리 전통문화를 찾아 재조명하고 문화리더를 양성하고, 젊은 세대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고 평화공존 콘서트를 통해 기성세대와 386세대 및 디지털 세대간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 병영체험을 통해 청소년 및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에 기여
- 6.25 62주년 평화공존 콘서트는 신규 사업으로 정확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미흡함. 특히, 애국심고취사업의 근본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25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상륙작전일과 서울수복일 등에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지부별 사업의 경우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점검이 요망됨

○ 대학생 지식봉사 활동('12년 70백만원)

- 지식봉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 대학생 멘토와 멘티 선발을 통한 지식봉사 활동 전개로 충분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됨. 즉, 봉사단 조직 등에 많은 예산 투입으로 봉사활동 지원에 어려움 예상되었으나 목표를 상회하는 멘토의 참여와 생활단위의 멘토링으로 효과를 배가함

- 따라서 봉사단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동네행복 지킴이 운영('12년 240백만원)
 - 사회 취약계층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1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회원의 적극 참여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지역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봉사단 연수는 하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대장정('12년 130백만원)
 - 대학생(탈북대학생 포함) 및 해외동포 자녀들이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DMZ 대장정 실시, 내 나라와 국토의 소중함 느끼는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 대학생들에게 분단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을 이끄는 의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 훈련, 체험과 봉사, 대화와 토론 등 대학생들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15일간 발산하고,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여 사후활동까지를 연결하는 효과를 가져옴. 또한, 선형적 사례를 가진 선배들이 참여와 도움으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가져옴은 물론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동기유발에 기인하여 성과가 배가되는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해외동포 자녀, 탈북대학생 등 사업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가 다소 미흡함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현황

1. 행정안전부 검토안

-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영역을 계획수립, 집행, 성과달성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계획수립 부문(30%)은 계획(20%), 조직(5%), 관리(5%)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항목과 평가지표로 구성됨
 - 집행 부문(30%)은 대외(10%), 대내(20%)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이 구성됨
 - 성과달성 부문(40%)은 실적(30%)과 수혜자 참여만족도(10%)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의 18개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해 검토한 2개안은 다음과 같음

<표 3-4> 행정안전부 1안(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계획 수립 (30%)	계획 (20%)	사업개발 및 추진 방법	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여부 ②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니즈 파악 여부
		사업목표 설정	① 사업목표 설정 여부 ② 재정적, 시간적, 규모면에서 실행 가능한 목표 확인 ③ 성과지표의 구체적 설정 및 목표와의 연관성
	조직 (5%)	책임자 지정 유무	① 담당자 지정 유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전문성 ② 중간교체시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 정도
		조직 구성 및 체계	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관리 (5%)	재정관리 체계	① 재정관련 서류, 증빙 구비 상태 ② 재정 담당자 지정 유무
		사업관리 체계	① 서류의 구비 상태 ② 일정관리 ③ 보고서 관리
집행 (30%)	대외 (10%)	기관 활용도	①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파트너십
		사업홍보	① 사업 참여 및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노력
	대내 (20%)	사업운영	① 계획 대비 집행실적 ②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 실적 ③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여부
성과 달성 (40%)	실적 (30%)	사업달성도	①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사회적 기여도	① 사업에 사회에 미친 기여도 ② 사업목적 이외의 부수적인 파급효과
	수혜자 (10%)	수혜자 참여도	①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 여부

※ 각 세부 평가항목(12개)별 상(10점), 중(8점), 하(6점)로 정성 평가

<표 3-5> 행정안전부 2안(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계획 수립 (30%)	계획 (20%)	사업목표 설정	① 사업 목표설정 여부 ② 재정적·시간적·규모면에서 실행 가능 목표인지 여부 ③ 성과지표의 구체적 설정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개발 및 추진 방법	① 사업목표에 따른 기본방침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②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여부 ③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니즈 파악 여부
	조직 (5%)	책임자 지정 및 업무 전문성	① 담당자 지정 유무 ②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전문성 정도 ③ 중간 교체시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 정도
		조직 구성 및 체계	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② 사업수행에 대한 단체의 지원 체계 여부
관리 (5%)	사업관리 체계	① 재정관련 서류, 증빙 구비 상태 ② 재정담당자 지정 유무 ③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여부	
집행 (30%)	대외 (10%)	기관 활용도	①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파트너십
		사업 홍보 및 교육	① 사업 홍보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② 사업 참여 및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
	대내 (20%)	사업 운용	① 계획 대비 집행실적 ②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 실적 ③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 여부
성과 달성 (40%)	실적 (30%)	사업 달성도	① 사업일정·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③ 사업결과 차기년도 피드백(환류) 유무
		사회적 기여도	① 사업이 사회에 미친 기여도 ② 사업목적 이외의 부수적인 파급 효과
	수혜자 (10%)	수혜자 참여도	①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 여부 ② 수혜자 명단 및 증빙서류 구비 상태

주 : 고덕체의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1안에서 추가된 것임

* 각 세부 평가항목(11개)별로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으로 정성 평가

○ 행정안전부 평가지표 대안에 대한 평가

- 첫째, 단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누락되어, 평가 이후 단체역량을 강화시킬 유인수단이 부재함

- 둘째, 지표 간 항목 간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함
- 셋째, 세부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함
- 넷째, 단체의 규모를 반영할만한 지표가 누락되어 있음
- 다섯째, 다양한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될 일반 지표가 미흡한 수준임

2. 선행연구(서울시 적용)의 평가지표

- 서울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최창수 외, 2005) 연구)
 - 단체역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표화하였고,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함
- 기존모형의 구성
 - 기존모형은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모형은 기관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단체역량 부문, 운용과정 부문, 사업성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였음
 - 단체역량 부문에서는 조직체계, 재정관리체계, 직원의 업무추진능력을 세부평가 지표로 설정하였음
 - 운용과정 부문에서는 계획대비 사업추진도, 관련기관과의 협조, 외부인력의 활용, 추진방식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투명성,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세부 평가지표로 설정함
 -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성과의 수준과 범위, 자체평가의 수준, 파트너십 구축 정도를 세부 평가지표로 설정함

<표 3-6> 기존모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지표	
단체역량	1. 조직체계	1. 사업담당 책임자 지정여부 2. 적정한 인력의 조직정도	
	2. 재정관리체계	1. 재정관리의 체계성 2. 전체 예산 중 자주재원 비율	
	3. 상근직원의 업무추진능력	1.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책임부여 정도 2. 사업관련 제반 업무자료의 관리 수준	
운용과정	4. 계획대비 사업 추진도	1.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정도 2.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변경의 타당성	
	5. 관련기관과의 협조	1. 외부기관의 활용 노력 2. 유사사업 추진 민간단체와의 상호협조 정도	
	6. 외부인력의 활용	1. 자원봉사자 활용 정도 2. 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정도	
	7. 추진방식의 적절성	1. 사업추진방식의 목표와의 연계성 2. 사업대상 집단 확보의 적절성	
	8. 예산관리의 투명성	1. 사업계획상의 매칭펀드 준수 정도 2. 집행예산의 근거확보 정도	
	9. 예산관리의 효율성	1. 예산지출내용의 합목적성 2. 예산사용근거의 적절성	
사업성과	10. 사업계획 달성도	1. 사업목표의 완성 정도 2. 지원금액 대비 사업성과의 정도	
	11. 사업성과의 수준과 범위 (사업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	서비스제공	1. 서비스제공의 충실성 2. 사회적 기여도
		감시	1.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2. 사회적 기여도
		여론환기	1. 수혜집단의 참여도 및 반응도 2. 장기적 파급효과
		제안	1. 성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2.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
	12. 자체평가의 수준	1. 자체평가의 근거와 내용의 타당성 2.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도출 수준	
13. 파트너십 구축 수준	1. 사업성과와의 연관 보완 정도 2.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수준		

주 : 고덕체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평가모형에서 제외되어 있음

○ 기존모형의 의의와 한계

- 기존 점검표 수준의 평가에 비하면 체계적인 평가모형이 제안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동 모형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120여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한 결과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큼
- 단체역량도 우수하고, 운용과정도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업결과도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그러나 동 평가체제에서 단체역량이 우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즉,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도인데, 상세히 검토해 보면 구조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사업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산과 인력의 소규모로 이어짐
- 이 경우 특정 단체의 경우 불가피하게 단체역량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음
- 물론 사업담당 책임자의 지정 등 상대적으로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지표도 있지만 인력규모는 통제 불가 지표일 수도 있음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지표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매년 정부예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예산 당국인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⁵⁾

5)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PART를 벤치마킹해서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매 4년마다 주요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제도인 Strategic Review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재정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해당사업에 대해 자율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제도임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결과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시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첫 해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었고,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는데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주관해 실시하고 있음⁶⁾
- 정부가 2005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율성을 갖되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2004년부터 실시되었던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⁷⁾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에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하였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예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환류가 가능함

6)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7)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지출규모와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를 설정하고, 이러한 총액배분의 틀 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기존의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제고를 위해 단위사업 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부여하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과의 연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표 3-7>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와 특징

구 분		평가지표와 활용	평가 특징
접 근		- 사업 평가	
평가 지표	계획	- 사업 목적 명확성 - 추진 방식 효율성 - 유사 중복성 - 성과 목표치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수행 ▪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식과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일부 이의를 제기 ▪ 정부개입의 결과 뿐 아니라 계획 및 집행단계의 적절성도 평가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자원배분에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 ▪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 ▪ 여러 원천에서 생산된 자료를 사용 ▪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어려움 ▪ 부서의 자율평가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평가
	집행	- 예산 대비 집행율 - 모니터링 체계 -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	
	성과	- 성과 목표치 달성 - 사업의 효과적 수행여부 - 평가결과의 환류 여부	
평가결과		- 점수에 따른 단계 구분 - 예산 배정에 활용	

- 평가항목은 15개의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4개의 추가질문으로 구성됨
 - 사업유형은 모두 7개로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조사·교육 등 기타사업으로 구분됨

<표 3-8>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구분

		15개 공통질문	가중치
계획 (3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75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75
		1-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3.75
		1-4.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75
성과계 획(15)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1-6.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5.0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집행 (20)		2-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이 있는가?	5.0
성과 (5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0.0
		3-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	5.0

- 기획재정부는 사전에 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기준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항목별로 “예/아니오”로 답변하며, “예”라고 답변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단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항목 등 일부 항목에서는 4등급으로 나누어 답변할 수 있음
 - 항목별 평가결과는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 4단계로 등급화하여 공개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유형별 추가질문
 - 각 사업의 유형을 SOC사업, 대형시설·장비구매 (자산취득), 기타 직접사업(조사, 서비스 등 기타사업), 출연·출자사업, 용자사업,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표 3-9>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단계
SOC	1-SOC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계획
	2-SOC1.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집행
	2-SOC2.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	집행
시설·장비	1-시설장비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계획
	2-시설장비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계획
기타 직접	1-기타직접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계획
출연·출자	1-출연출자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계획
	2-출자1. 대출조건 설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용자 사업	2-출자2. 자금 회수계획 대비 자금 회수율은 양호한가?	집행
	민간 보조	1-민간보조1. 다년간 연속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집행
지자체 보조	1-지자체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계획
	2-지자체보조1.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집행

4. 자치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성과평가지표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관리 담당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3-10>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성과 평가지표

	질문 사항	배점*
사업 및 계획 (15)	1-1. 다른 보조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주 : 질문사항 배점 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 보조사업의 계속지원여부 결정 기준

- 80점 이상 : 계속 지원 가능
- 80점 미만 ~ 60점 이상 : 지원 감축
- 60점 미만 : 지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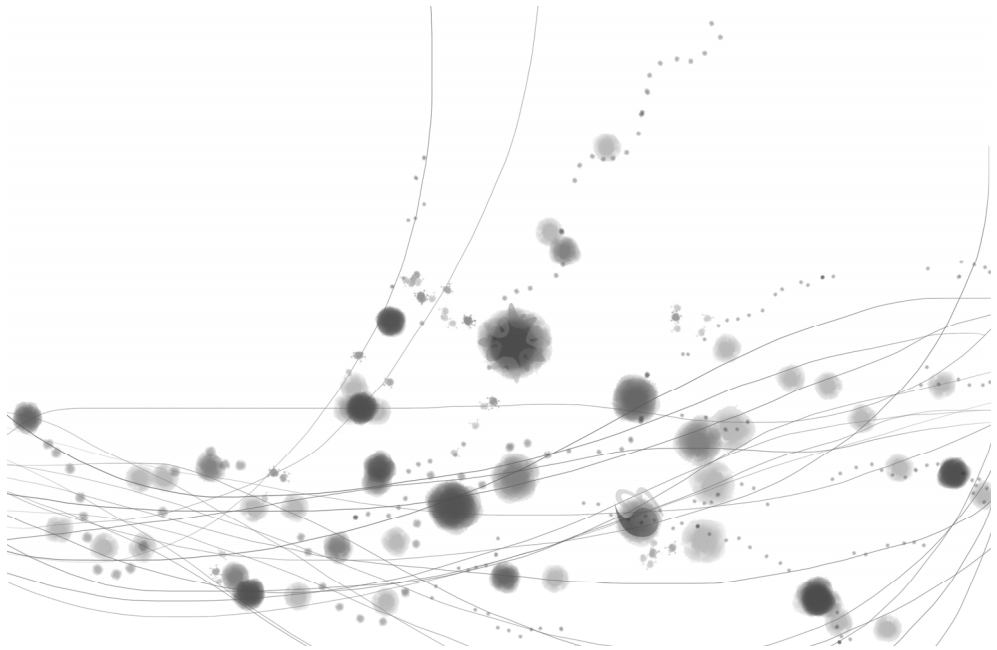
제 4 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제1절 평가의 논리와 기본방향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평가지표 구성(안)

제3절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제 4 장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제1절 평가의 논리와 기본방향

1. 평가 논리

○ 평가의 구분

-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사전평가를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라 하고, 사후평가를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라고도 함
 - 형성평가는 사업이나 정책의 개발과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이나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총괄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임
- 평가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inside-evaluation)와 외부평가(outside-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평가는 자체평가와 자체감사가 대표적인
 - 자체평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고, 자체감사는 사업 당사자가 아닌 부서 내 전문 평가기구가 수행하는 것임
 - 외부평가는 감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구분되는데, 감사는 전문 감사기관에 의한 평가이고, 전문가 평가는 일반적으로 민간에 의한 평가를 지칭함
-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를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과정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과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자체평가보다 외부평가 중심으로
 - 공공부문개혁으로 정부기능이 축소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확대되어 왔고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들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과정(process)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영향 또는 성과(performance)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평가의 주체는 내부가 아닌 외부이어야 할 것임
 - 왜냐하면 내부평가를 적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체평가에 해당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자체평가가 작동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 자체평가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단일 조직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자체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임
 -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부서가 존재하여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부서별 목표설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간 합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평가는 쉽지 않음
- 따라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외부감사에 의한 평가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감사의 경우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 부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결국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혼용하는 형태임
 - 사전평가는 지원단체 선정 심의과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사후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후평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여부, 사업추진 결과의 합목적성 여부임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외국의 경우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기초로 진행됨(최창수 외, 2005)
 - 1993년 통과된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의 기본틀은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기초한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와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음⁸⁾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도 투입-산출이라는 체제이론 틀에 근거하여 과정과 산출(성과)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모형을 구축해야 함. 특히, 산출(output measures)과 성과(performance measures)에 대한 동시 고려는 핵심사항 중 하나임

2. 지표구성 논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 평가모형
 - 그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용된 도구는 주로 나열식 점검표였고, 체계적인 평가모형은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었음
 - 최창수 외(2005년)가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모형 구축이 유일한 것이었는데, 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되었음

8)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평가법(GPRA: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의 영향으로 오레곤, 미네소타, 텍사스, 유타 등과 같은 주 정부들도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50여개의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경우 주 의회에서의 예산승인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는데, 평가지표에는 산출지표(output measures)와 성과지표(outcome measures)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동 평가모형의 강점은 일단 평가모형 및 지표가 논리모형에 따라 설계되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임
 - 동 연구에 의하면 국정홍보처가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표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나열식 점검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임
 - 예컨대,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 조직역량, 프로그램, 대상집단, 예산집행, 기대효과, 국정공조 등인데, 이는 기준이 아니라 평가분야라고 판단됨
 - 해당 분야별 복수의 질문을 항목으로 정하여 묻는 방식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 따라서 동 연구는 국정홍보처의 평가모형이 논리모형(logic model)이 아니라고 지적한 후, 평가체계 구성의 논리성을 강조함
- 본 연구의 비영리민간단체 평가모형
- 본 연구 역시 평가기준의 근거, 지표 간 중복 여부, 지표 간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평가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 첫째,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평가지표가 구성됨
 - 둘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종 여타 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되어야 함
 - 셋째, 지표 간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넷째, 지표가 반드시 정량적일 필요는 없음. 공익사업의 특성상 정성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단체의 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가점을 해야 할 것임. 이는 첫 번째 기준과 일견 배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투입(input)에 동일한 성과(outcome)을 창출했다면 단체역량이 더 작은 단체가 더 나은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가 기존 최창수 외(2005)에 비하여 다른 점은 단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최종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겠다는 것임. 이 경우 단체의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종 평가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

제2절 국민운동단체의 평가지표 구성(안)

1. 평가지표 개요

- 재정사업의 평가영역을 준비단계, 집행단계, 성과달성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통상 계획단계, 집행단계, 결과단계로 구분되는 평가체계와 유사하며, 특별히 준비단계로 명명한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상 주어진 소규모 예산으로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제한되기 때문임
- 통상적으로 계획단계라고 하면 기관의 임무, 비전을 상급기관의 비전과 연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는 일체의 과정을 총칭하는데, 이 경우는 상급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의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시작 또는 준비단계로 설정함
- 본 평가지표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목표와 사업추진방법 관련 각종 준비단계 노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 집행단계에서 중요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했는가 여부임
 - 둘째, 해당 사업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했는가 여부이다. 효율적 추진은 다시 업무개선 노력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구분되어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셋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 여부임. 즉,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동원 능력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 평가지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단 대내외로 구분하여 활동을 측정하되, 대내 측면에서 사업운용의 실적에 집행실적, 업무개선노력, 예산절감노력을 포함함. 대외 측면에서는 협업 노력, 자원동원 노력 등을 측정하고자 함.
- 성과달성단계는 실적(output), 성과(outcome), 그리고 환류(feedback)로 구성됨
 - 성과는 기대효과, 사업 효과 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성과(outcome)달성 정도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지만, 성과측정의 어려움, 실적 달성 관련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3차원으로 측정되는 것이 현실적임
 - 현 평가지표는 이를 활용하여 대략 실적, 성과, 환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함
- 신규 평가 세부 지표(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1> 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준비 단계 (30%)	사업준비 (20%)	사업목표 설정 (8%)	① 사업 목표설정 여부: 기본점수 부여 ② 사업목표의 적극성: 인력 예산대비 목표 수준 평가 ③ 사업목표의 적절성: 기관의 설립근거와 연계 정도 ④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 성과지표 수립 여부	
		사업추진방법 (7%)	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여부 ② 이해관계자 파악 및 사업대상집단 확보 적절성 ③ 사회문제 사전조사 및 목표설정을 위한 논의 과정	
	인력구성 (10%)	책임성 확보 (6%)	① 사업 담당자 지정 유무 ② 책임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전문성 정도 ③ 예산 대비 담당 업무 인력 배정 비율	
		전담조직 구성 (4%)	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② 사업수행에 대한 단체의 지원 체계 여부	
집행 단계 (20%)	대외 (10%)	외부자원 활용도 (10%)	① 이해관계자 연계, 협력 및 파트너십 활용 정도 ②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 정도 ③ 사업 홍보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④ 사업 참여 및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	
	대내 (10%)	사업 운용 (10%)	①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 ②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상태 ③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 실적 ④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성과 달성 (50%)	실적 (30%)	사업 달성도 (20%)	① 사업일정·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②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③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정도	
		사회적 기여도 (10%)	서비스제공	① 서비스제공의 충실성 ② 사회적기여도
			감시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사회적 기여도
			여론환기	① 수혜집단의 반응도 ② 장기적 파급효과 정도 ③ 홍보노력 및 정도
	제안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성과물 활용가능성과 범위	
평가환류 (20%)	평가 및 환류 (20%)	①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 여부 ② 자체평가의 수준 및 내용 타당성 ③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각 세부 평가지표(35개)별로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으로 정성 평가 (단, 사업목표 설정 여부의 경우 확인될 경우 5점)

2. 평가지표 구성 및 내용

가. 준비단계(30%)

- 준비단계(30%)는 사업 자체의 준비단계와 인력배분 관련 준비단계로 구분됨. 사업 준비단계는 다시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으로 구분됨

(1) 준비단계의 사업준비(20%)

- 준비단계에서 사업준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표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목표의 설정(10%)과 관련하여 목표설정 여부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함
 - 간혹 사업목표 설정 자체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정지표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음
- 둘째, 사업목표의 적극성 여부가 중요한 점검 지표가 되는데, 이는 인력과 예산 등 역량 대비 설정된 목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를 측정하고자 함
 - 사업목표의 적극성 정도는 성과달성 수준과 보완적으로 측정되는 지표임
 - 통상적으로 사업목표의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성과달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반면 지나치게 낮은 목표 설정은 달성하기에 쉽기 때문임
 - 따라서 사업목표 설정의 적극성 정도와 성과달성 정도를 적절히 배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위시한 많은 평가방식이 성과달성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음
 - 이는 적극적인 사업목표 설정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향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셋째, 기관설립의 근거와 관련되어, 해당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를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 통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기관설립 근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지표에서 측정 상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 다만, 사업선정 또는 사업목표 설정이 기관의 설립근거와 지나치게 상이한 경우 기관의 존립근거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는 함. 즉, 기관 설립취지 및 근거와 최대한 합당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점을 주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음

(2) 준비단계의 사업추진방법(10%)

- 사업 준비단계의 두 번째 고려사항은 사업추진방법(10%)과 관련되어 있음
 - 사업추진방법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전적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함임
 -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및 사업대상 집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임
- 첫째,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추진의 효과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임. 사업추진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사업추진의 방향과 속도가 타당성을 갖게 될 것임

- 다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누구와 협의할 것이며,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전략적 접근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사업일정표가 이러한 사항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일정표 상에 상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임. 일정표 상에 나타날 중요 사항 중 하나는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것인데, 예컨대 누구에게 먼저 접근할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집행할 것인가? 예산집행은 언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사전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이해관계자 및 사업대상 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추진전략과도 일맥상통함
 - 특히, 사업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효과에 대한 판단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사업실패로 이어질 것임
 -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1차 그룹, 2차 그룹, 3차 그룹 등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각 그룹별 사업 추진 관련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변화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
 - 따라서 사업 추진 주체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셋째, 사업주체는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컨대, 과학적 사전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가상의 시나리오 준비, 사업이 완료된 후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 특히,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전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는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임

(3) 준비단계의 인력구성(10%)

- 준비단계에서 인력구성(10%)은 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담당자의 전문성 정도, 예산 대비 인력 배정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직구성 여부 및 역할 분담 여부, 지원체계 구축 여부, 기타 총 인원 대비 상근직원 수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인력구성의 경우 다시 책임성 확보 여부(6%)와 전담조직 구성 여부(4%)로 구분됨
- 책임성 확보 정도는 사업담당자의 지정 유무, 책임자의 전문성 정도, 예산대비 인력배정 비율 등에 의하여 측정됨
 -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 관련 책임자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함
 - 민간기업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적절한 업무 분장표에 의하여 명확히 지정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관련 책임소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

- 이 임시적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업별 책임자 지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선을 초래하기 쉬움
- 따라서 사업별 책임자 지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추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 할 것임. 이러한 사항들이 점검의 대상임
- 둘째, 사업 책임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정도인데, 책임자로 지정된 담당자는 조직 내외 누구보다도 동 업무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임
 -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과제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시 구비되어야 함
 - 전문성의 구비 정도에 따라 사업추진 및 성과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이 점검 대상임. 또한 전문성은 단순히 학력, 경력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업무 추진경험, 주위 평판 등 정성적 방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예산대비 담당업무 인력배정 비율에 의한 측정인데, 이는 단체의 규모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함
 - 해당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인력배정 정도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단체의 규모와 관련이 있음
 - 그런데 단체의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총 인력보다는 총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규모와 인력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기적 사업 추진보다는 부정기적 일회성 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임

- 따라서 조직의 규모는 총 예산을 통하여 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인력 배정 비율 역시 총 예산대비 산출이 더 정확할 수 있음
- 인력구성과 관련된 준비단계에서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임
 -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조직 간 역할 분담도 설정되어 있는가도 점검사항임
 - 특정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일이 쉽지 않음. 통상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하나의 조직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역할분담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둘째, 전담조직에 더하여 단체 차원의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기대됨
 - 별도의 지원체계란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시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함으로써 예컨대, 홍보팀의 지원이 대표적임
 - 국민운동 차원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담조직이 별도의 독립 홍보팀을 갖추기는 어려운데,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보조할 수 있는 홍보팀이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나. 집행단계(20%)

- 집행단계는 크게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구분됨. 참고로 수정안에 의하면 집행단계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실적, 집행효율성, 자원 활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음

(1) 대내적인 측면(10%)

- 대내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사업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상태,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실적,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를 들 수 있음
- 첫째,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상태 지표를 통하여 점검해야할 사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임
 - 간혹 사업 추진이 조기에 너무 일찍 추진되거나 연말까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거나 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일정 관리는 사업 성공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지표임
 - 일정에 더하여 시기별 작성되는 보고서의 상태와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동 사업의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준이 됨
- 둘째,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실적 지표와 관련하여 점검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낭비적 요소를 줄이거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예산절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예산절감 노력이 있음
 - 다음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재무자원의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컨대, 타 기관으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기부금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임
 - 양자 공히 예산절감으로 이해되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함

- 그리고, 효율화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점검해야할 사항은 업무개선 사례임
 -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에 기초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함
 -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는 점검을 통하여 가점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와 관련하여 점검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모니터링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음. 즉,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과 사업이 추진된 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임
 - 집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전자에 해당되며, 사업 주체 스스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우며, 일차적으로는 내부에 의한 감시가 중요함
 - 외부감시 역시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주로 내부감시 실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단체가 사업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임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곧 사업성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지나치게 유연한 대응은 자칫 추진일정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2) 대외적인 측면(10%)

- 대외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외부자원 활용도로서 이해관계자 연계, 협력 및 파트너십 활용 정도, 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용 정도, 사업 홍보 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사업 참여 및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임
- 첫째, 이해관계자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이해관계자 파악을 기초로 하여 그들과의 연계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를 1차, 2차, 3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함. 다음으로 그들과의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실적 또는 사례를 확인하고, 파트너십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 파트너십의 효과가 클 경우 사업성과도 제고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파트너십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실적을 확인해야 할 것임
- 둘째, 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용 정도 지표에서 주목할 사항은 우선 적절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추진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
 - 또한, 전문가의 활용 정도를 측정할만한 실적 및 사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굳이 외부 전문가 지표를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내부 전문가는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 외부 전문가의 활용 정도는 단순히 회의 참여횟수 등만이 아니고,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배움이 어떻게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중심으로 측정될 것임

- 셋째, 사업 홍보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지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과거에는 사업 추진 결과를 홍보하는 선 집행, 후 홍보 전략을 활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홍보가 개입되는 이른바 전방위 홍보시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홍보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일단 중요한 점검 사항이며, 동시에 관련 조직의 구성 여부인데, 이는 물론 해당 사업 관련 노력을 기울인 바에 국한함
- 넷째, 사업 참여 및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표는 단체의 사업을 알리는 노력과 대상 집단에 대한 일종의 교육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결국 대상사업집단이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성과 역시 측정이 불가능함
 - 또한, 사업에 대한 몰인지는 교육부재 탓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단순 홍보를 넘어서 적극적인 교육 등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다. 성과달성단계(50%)

- 성과는 크게 실적과 성과로 구분되어 이해되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환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산출지표로서의 실적, 결과지표로서의 성과,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류 항목이 이에 해당함

(1) 사업달성도(20%)

- 사업달성도 평가항목은 사업일정, 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사업 성과 지표 달성도,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사업일정, 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지표는 대표적인 실적 지표이며, 준비단계에서 설정된 사업목표의 적정성과 연계됨
 - 동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님. 우선 당초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로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임
 - 다음으로 목표가 높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거둔 경우로서 목표 자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 예컨대, 타 단체의 실적 또는 외국 사례까지 검토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수하다면 일단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추진방법 등 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됨
- 둘째,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에 대한 점검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성과지표 군을 수집하여 이를 지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작업인데, 대개의 경우 실적과 성과를 혼돈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표의 대표성 문제가 준비단계에서부터 논의될 수 있는데, 만약 준비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동 지표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됨
 - 평가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임
 - 만약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에 비중을 둘 것인지, 사업 자체의 성과 달성도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할 것임
- 셋째,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정도를 점검하는 것인데, 계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활용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일종의 비계량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지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함

- 다만, 수치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임
- 정성 평가 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은 성과지표 관련 사례, 실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설명하는지 여부임. 또한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질적 수준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임
- 비계량 성과평가의 경우 설정된 성과지표에 의하여 포착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의 대상임

(2) 사회적 기여도(10%)

- 사회적 기여도는 다시 서비스 제공 유형, 감시 유형, 여론 환기 유형, 제안 유형으로 구분되어 점검
 - 사회적 기여도란 측면에서의 성과 부문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략 상기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임
 -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상기의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함
 - 따라서 성과지표 역시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다른 세부지표에 의하여 점검되는 것이 합리적임
- 첫째, 서비스 제공 유형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할 것임
 -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은 실적 자료와 정성평가에 의하여 점검될 것인데, 이 경우 서비스 제공 관련 일정 준수, 서비스 대상 집단 선정의 합리성, 예산대비 서비스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해야 할 것임
 - 사회적 기여도는 언론보도, 평판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등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이해관계자 만족도는 주로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잡음 및 기타 불필요한 갈등 등이 확인되었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임
- 둘째, 감시 유형의 경우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과 사회적 기여도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사회적 기여도는 서비스 제공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로 언론보도, 평판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등이 주요 점검 사항임
 -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은 감시 건수 등 실적에 더하여 감시효과에 의하여 주로 측정될 것임
 - 감시효과란 단체의 개입 이후 건전성 등이 제고되었는지 여부, 대상 집단의 만족도 등에 의하여 측정됨
 -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감시에 의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감시대상 사업체 또는 기관의 행태변화, 국민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 셋째, 여론 환기 유형인데, 특별히 수혜집단의 만족도, 장기적 파급효과, 홍보노력 및 정도에 의하여 측정될 것임
 - 여론 환기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임
 - 수혜집단인 국민의 만족도는 국민운동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인식전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음
 - 장기적 파급효과를 세부지표로 설정한 이유는 특정 사업을 통한 여론 환기는 대체로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장기적 파급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정성평가에 의하여 충분히 측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홍보 노력 및 정도는 사실상 실적 지표인데, 주로 홍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홍보건수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홍보의 효과는 충분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대체로 홍보노력과 효과는 일치한다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실적과 성과를 공히 점검해야 할 것임
- 넷째, 제안 유형인데 사업성과물의 충실성과 성과물 활용 가능성과 범위에 의하여 측정될 것임
- 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점검 사항은 사업 성과물의 질적 수준임
 - 제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편향될 경우 자칫 제안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더하여 제안의 활용 가능성 및 범위도 중요한 점검 사항임
 - 제안의 내용이 가치 있다면 활용 가능성도 높을 것이며, 제안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임
 - 다만, 내용의 충실성이 높다고 하여 제안의 활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제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해야 할 것임
 - 제안의 내용이 풍부하고 내실이 있다고 하여도 제안의 적실성, 실효성 등이 낮을 경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등 방향성,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용의 충실성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성,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3) 평가 및 환류(20%)

- 평가 및 환류는 세 가지 세부지표에 의하여 측정됨. 즉, 외부평가, 내부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완료됨

- 첫째, 외부평가는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만족도 조사에 의하여 확인됨
 - 참여도와 만족도가 공히 높을 경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참여도가 낮은 경우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수 있음
 - 반대로 참여도는 높는데, 만족도가 낮다면 개선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내부평가는 주로 자체평가를 의미하는데, 우선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해야 할 것임
 - 자체평가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 이 경우 총리실에서 보급하고 있는 자체평가 틀을 원용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사항임
 - 자체평가의 타당성 확보가 보편적인 시스템 구축 여부에 의하여 점검될 수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환류하여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의 대상임
-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인데, 우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자체평가의 경우 시스템 자체에 환류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지만 외부평가의 경우 자칫 평가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음
 - 수혜자 불만, 제언, 언론보도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과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의 준비 등이 주요 점검사항임
 - 전년도 사업의 결과를 해당 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도 부차적이지만 점검사항으로서 환류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

※ 기타 집행단계를 재구성한 제2안은 다음과 같음

- 집행단계는 통상적으로 집행실적 부문, 집행의 효율성 부문, 집행과정에서 자원동원능력 부문으로 구분되어 평가됨. 상기의 수정안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지표체계상 3개 부문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서 제2안을 작성해 보았음

<표 4-2> 국민운동 국고지원사업 평가세부지표(수정안)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준비 단계 (30%)	사업준비 (20%)	사업목표 설정 (10%)	① 사업 목표설정 여부: 기본점수 부여 ② 사업목표의 적극성: 인력 예산대비 목표 수준 평가 ③ 사업목표의 적절성: 기관의 설립근거와 연계 정도 ④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 성과지표 수립 여부
		사업추진방법 (10%)	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여부 ② 이해관계자 파악 및 사업대상 집단 확보 적절성 ③ 사회문제 사전조사 및 목표설정을 위한 논의 과정
	인력구성 (10%)	책임성 확보 (6%)	① 사업 담당자 지정 유무 ② 책임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전문성 정도 ③ 예산 대비 담당 업무 인력 배정 비율
		전담조직 구성 (4%)	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② 사업수행에 대한 단체의 지원 체계 여부
집행 단계 (20%)	집행실적 (5%)	사업운영 (3%)	①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상태 ②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모니터링 (2%)	①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 ② 즉각 점검 및 환류
	집행효율 성 (5%)	업무개선 (3%)	① 업무 관련 조직 개편 ② 업무 프로세스 개선
		예산절감 (2%)	①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 실적 ② 재무자원 추가 확보 실적
	자원활용 (10%)	대내 (5%)	① 사업 홍보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② 부서 간 협업 체계
		대외 (5%)	① 이해관계자 연계, 협력 및 파트너십 활용 정도 ②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 정도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③ 사업 참여 및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	
성과 달성 (50%)	성과 (30%)	실적 (10%)	① 사업일정·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②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③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정도	
		성과 (20%)	서비스제공	① 서비스제공의 충실성 ② 사회적기여도
			감시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사회적 기여도
			여론환기	① 수혜집단의 반응도 ② 장기적 파급효과 정도 ③ 홍보노력 및 정도
			제안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성과물 활용가능성과 범위
	평가환류 (20%)	평가 및 환류 (20%)	①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 여부 ② 자체평가의 수준 및 내용 타당성 ③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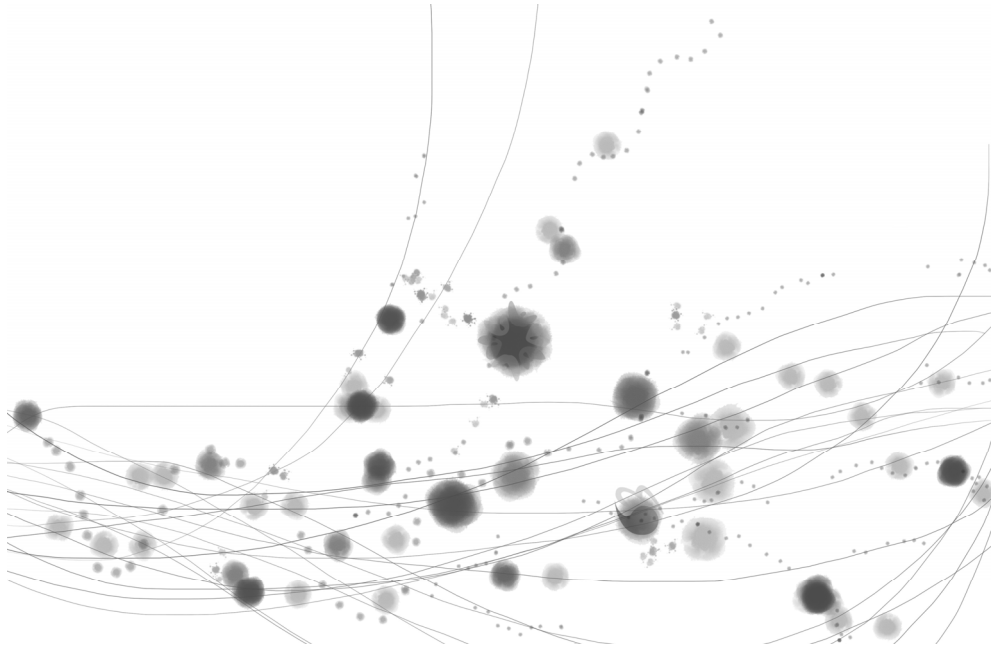
제3절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 각 세부 평가지표(35개)별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으로 정성평가 하되, 세부지표별 정량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함
 - 다만, 사업목표설정 여부에 대한 세부지표에서는 확인될 경우 5점, 확인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지표별 정량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최종 점수는 5점 스케일에 기반하여 정성 평가하는 방식의 장점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평가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평가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임

- 따라서 객관적 자료는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자료의 객관성 확인 작업도 중요한 평가활동 중 하나임. 말하자면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경우에는 패널티가 주어질 것임
- 영역별,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지표별 가중치 역시 매우 중요함. 영역별 가중치는 일단 최근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30%, 20%, 50%를 차용함
 - 최근의 추세는 성과달성 정도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결국 사업의 계획, 방식보다는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AHP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마땅할 것임. 그러나 전문가 의견 역시 대상 사업별, 시대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제안된 지표체계에 적시된 가중치는 기존 연구(재정사업평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평가, 총리실 자체평가 등)를 참고하였으며, 일정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가중치 변화에 대한 점검은 향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동사업 운영의 성과,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즉,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한 공익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사업 평가 세부 지표(안)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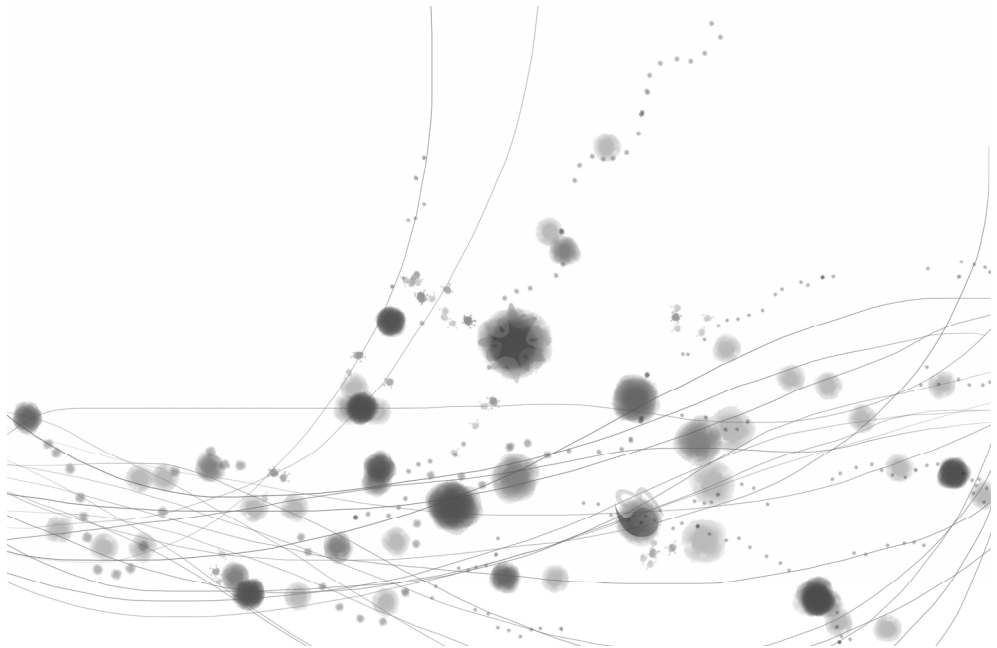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준비 단계 (30%)	사업준비 (20%)	사업목표 설정 (8%)	① 사업 목표설정 여부: 기본점수 부여 ② 사업목표의 적극성: 인력 예산대비 목표 수준 평가 ③ 사업목표의 적절성: 기관의 설립근거와 연계 정도 ④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 성과지표 수립 여부
		사업추진방법 (7%)	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여부 ② 이해관계자 파악 및 사업대상집단 확보 적절성 ③ 사회문제 사전조사 및 목표설정을 위한 논의 과정
	인력구성 (10%)	책임성 확보 (6%)	① 사업 담당자 지정 유무 ② 책임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전문성 정도 ③ 예산 대비 담당 업무 인력 배정 비율
		전담조직 구성 (4%)	①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② 사업수행에 대한 단체의 지원 체계 여부
집행 단계 (20%)	대외 (10%)	외부자원 활용도 (10%)	① 이해관계자 연계, 협력 및 파트너십 활용 정도 ②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 정도 ③ 사업 홍보시스템 및 조직 구성 여부 ④ 사업 참여 및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
	대내 (10%)	사업 운용 (10%)	① 지속적 모니터링 여부 ② 일정 및 보고서 관리 상태 ③ 예산절감 및 효율화 추진 실적 ④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영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성과 달성 (50%)	실적 (30%)	사업 달성도 (20%)	① 사업일정·예산 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②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③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정도	
		사회적 기여도 (10%)	서비스제공	① 서비스제공의 충실성 ② 사회적기여도
			감시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사회적 기여도
			여론환기	① 수혜집단의 반응도 ② 장기적 파급효과 정도 ③ 홍보노력 및 정도
	제안	① 사업성과물 내용의 충실성 ② 성과물 활용가능성과 범위		
평가환류 (20%)	평가 및 환류 (20%)	① 수혜자 참여도 및 만족도 여부 ② 자체평가의 수준 및 내용 타당성 ③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각 세부 평가지표(35개)별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으로 정성평가 하되, 세부지표별 정량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함
- 영역별,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지표별 가중치 역시 매우 중요함. 영역별 가중치는 일단 최근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30%, 20%, 50%를 차용함

부 록

국민운동단체의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추진사업



〈부록〉 국민운동단체의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추진사업

1. 새마을운동중앙회

(1) 설립 목적, 이념

-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근면·자조·협동의정신과 도전·변화·창조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이념으로 함

(2) 설립 배경

- 1970년 4월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자리잡게됨으로써 조국을 근대화 시키는 뒷받침 역할을 하였으며,
- 80년대에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일시적인 정체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1980년 12월 1일 현재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정부 추진방식을 민간조직 위주로 전환시킴)
-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공장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5개 회원단체와 중앙연수원 운영

(3) 주요 사업

- 기본 목적사업

1.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회원 및 회원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조정
3.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5.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 사업
6.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비 등 지급 지원
7.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중점사업

<그린코리아 운동>

1. 녹색새마을운동 추진체제 정립
 - ① 대국민 선포식
 - ② 시도, 시군구 지역본부 출범 (공동)
 - ③ 실천가 양성 교육 (연수원)
 - ④ 녹색새마을운동 세미나 (중앙회)
2. 녹색생활화 실천 추진
 - ① 녹색생활 실천사항 캠페인
 - ② 친환경 식단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③ 물질약캠페인, 녹색새마을대청소
 - ④ 녹색시범마을육성 (시도별 2개소)
 - ⑤ 탄소포인트 가입운동 (시도시군구)
 - ⑥ 녹색새마을 청소년봉사대 (시군구)
3. 4대강(하천) 살리기
 - ① 담당구역별 지킴이 활동
 - ② 4대강 살리기 홍보 교육 (중앙회등)
 - ③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4. 지구온난화 방지 운동

- ①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통)
- ② 지구온난화 홍보, 교육 (중앙회등)
- ③ 자전거 타기 생활화
- ④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시군구)
- ⑤ 자원 재활용 운동
- 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스마트코리아 운동>

1. Smile(미소 가득한 시민)

- ① 미소 띤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
- ② 친절한 전화 응대, 친절한 손님맞이

2. Manner(예절 바른 시민)

- ①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예절 지키기와 금연하기
- ② 차례로 줄서기, 지하철 예절 (자리 양보 등) 지키기
- ③ ‘나’를 소중히 하는 만큼 ‘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 표현하기

3. Admiration(칭찬하는 시민)

- ① 남을 칭찬하여 나의 행복 찾기, 어른을 공경하기
- ② 비판보다 먼저 좋은 점 발견하기 (선플 달기)

4. Responsibility(책임을 다하는 시민)

- ① 기초질서 지키기, 공공 및 대중시설에서 불법, 무질서행위 안하기
- ② 음주운전 안하기, 신호등 및 정지선 지키기

5. Together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

- ① 해외여행시 에티켓 수준 향상하기
- ②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 받지 않기
- ③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기

<해피코리아 운동>

1. 어려운 가정 한 가족 손잡기 운동

- ① 장애인, 홀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운동
- ② 새마을며느리봉사대(결연, 밑반찬 배달 등), 경로위안잔치, 바깥나들이 동행
- ③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배, 부엌수리, 보일러 교체, 리모컨 스위치 교체 등)
- ④ 100만포기 김장 담가주기 및 100만장 연탄 나누기

2.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운동

- ① 결혼이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
- ② 한글, 생활문화, 부부 상담 및 교육(마을현장)
- ③ 새마을지도자의 멘토링 및 친정부모 초청, 친정 보내주기
- ④ 외국인 근로자와 일촌 맺기

3.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 ① 돌봄과 나눔의 행복한 이웃사랑 운동
- ② 이웃사랑 100만 후원회원 모집(개인 및 단체 회원)
- ③ 재능기부운동(프로 보노) 및 결연을 통한 기부문화 운동 확산

4. 도농교류

- ① 농업, 농촌, 농민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
- ②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개설
- ③ 도농 간 청소년 교류(한마음 공동체 캠프)
- ④ 도시 청소년 영농체험(부모와 함께하는 놀토의 추억)

5. 안전 지킴이 활동

- 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이웃사랑 운동
- ② 방역, 방범 활동, 청소년 귀가 도우미
- ③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④ 재난 재해 대비 현장 활동

<글로벌코리아 운동>

1. 외국인 지도자 새마을교육
2. 저개발국가 새마을 협력사업
3. 해외 현지 순회 새마을교육
4. 해외 새마을조직 지원, 육성
5. 글로벌 새마을운동 자문단 운영
6. 글로벌 새마을운동 포럼 운영
7.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4) 2011년도 주요사업(새마을운동중앙회 직접사업)

- “새마을의 날”제정 기념행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국가지정 기록물 지정, 녹색생활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알기쉬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젊은세대 뉴새마을운동 참여, “21C 새 세대의 뉴새마을운동”추진 전국 대학(원)생 대상 논문 공모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이용하기 캠페인, 새마을 동산, 국민참여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그린사랑!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장정, 온맵시 내복입고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3R자원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녹색생활 리더육성, 녹색생활의식 실천교육,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2011 도농교류협력사업, 다문화가족 친정가족 맺어주기, 뉴새마을운동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보급, 각종 자료수집 및 관리, 새마을운동 신문 발간, 저개발 새마을교육, 저개발국가 새마을협력사업, 새마을운동자료 DB구축, 외국인 견학시설 기능보강 사업

(5) 단체의 성과와 성공요인

- 국가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으로 전국 200만 회원의 통합된 의식을 발휘하고 있으며, 무상 봉사활동을 존재개념으로 승화시킨 놀라운 실천력으로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앙 및 전국 시도, 시군구에 상근 전문요원을 갖추어 자체 기획력과 조직운영, 사업 추진 및 성과 달성능력이 일반 사회단체와는 차별화된 민간단체로 평가되며, 정부의 행정조직에 버금가는 조직망과 언제라도 동원(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단체로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특히, 상근 및 비상근 소속 요원들이 국정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국가관과 숙련된 경험을 가진 점은 이 단체의 큰 장점이라고 할 것임
- 민관 협력 분야에서 일반 사회단체와 판이한 친화력과 검증된 실적으로 볼 때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단체로 평가됨

(6) 단체의 새로운 방향(중장기 발전 전략)

-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개 회원단체와 전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국민생활현장의 마을단위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 및 회원수에 비례한 능률적인 운용을 위한 상근요원이 부족한 실태임
- 국가 또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민생 분야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용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회원단체는 시대에 부합하는 단체별 설립목적과 고유 기능을 고려하여 재편 또는 통폐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정한 새마을운동 단체의 정의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
- 대학생·청년 회원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Y-SMU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전담요원 신설 등을 일자리 확충 정책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운동 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보편화하기 보다는 국민운동단체로 공영화하여 지속발전과 사회통합의 모티브로 육성되어야 함
-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확대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주권 주민 간 커뮤니티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채널로의 육성이 필요함

2.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1) 설립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설립 배경

- 지원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1991. 12. 31 제정)

(3) 주요 사업

- 범질서 확립 연중 캠페인
 - 매월 1일 전국 동시다발적인 범질서 캠페인 실시
 - 교통질서 지키기, 기초질서 지키기, 범질서 지키기 등 실시
-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 윤리의식 실종되는 현대사회인의 정신 계몽운동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사업
 -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가정사랑 실천 확산 사업
 - 가정의 파괴로 범죄의 시발점이 된 가족 사랑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
- 소외계층 돌봄 사업
 -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 곳곳에 회원들의 도움을 줌
 - 노인돌봄, 학교 야간 순찰,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돌봄, 저소득층 돌봄 사업 등
- 모범학생 돌봄 사업
 - 장학금 지급 및 후원사업 등
- 기타 회원 및 바르게살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줌

(4) 최근 주요 사업실적

○ 2009년도 실적

구 분	내 용	횟 수	인 원
합 계		36,632	7,021,802
국가브랜드 향상	친절교육, 캠페인, 모범업소 선정 등	428	17,302
녹색생활운동	공공장소 청결운동 및 국토 대 청결운동 등	9,493	3,971,223
다문화 운동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	553	20,512
국민통합 운동	국민 문화운동 등	6,050	240,283
기초법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10,363	272,112
지도자, 회원연수	임원위탁 교육 및 도민 행복 교육 등	2,373	65,360
효 운동	독거노인 현장봉사활동 등	1,429	51,118
바른해외문화 만들기	건강한 해외여행, 선진 여행 문화 만들기 등	125	7,526
에너지 운동	전등 끄기, 내복 입기 운동 등	898	1,127,243
협의회 특화 사업	월드 비전 봉사활동 등	1,411	1,066,455
기 타	도시주부 농촌 체험 등	5,468	382,949

○ 2010년도 실적

구 분	내 용	횟 수	인 원
합 계		40,236	1,525,192
국가브랜드 향상	친절교육 및 캠페인	727	28,013
녹색생활운동	자전거타기 운동,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 운동 등	9,128	319,855
다문화 운동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	613	23,827
국민통합 운동	국민문화운동 등	9,752	343,509
기초질서 및 법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9,493	347,205
지도자, 회원 연수	임원위탁 교육 및 도민 행복 교육 등	418	30,097
효 운동	효 교육 및 독거노인 현장봉사활동 등	2,687	68,390
바른 해외문화 만들기	건강한 해외여행, 선진 여행 문화 만들기 등	98	2,225
에너지 운동	전등 끄기, 내복 입기 운동 등	1,033	30,766
협의회 특화 사업	월드 비전 봉사활동 등	3,668	123,365
기 타	도시주부 농촌 체험 등	2,619	207,940

○ 2011년도 실적

구 분	내 용	횟 수	인 원
합 계		29,382	1,157,718
국가브랜드향상	국경기 태극기 게양, 현충일 참배, 대북규탄대회	1,131	57,596
기초질서 및 법질서	각종 법질서 바로세우기	7,012	223,168
녹색생활운동	환경정화, 국토대청결운동, 에너지 절약 홍보	5,694	156,284
다문화행사	다문화 모범 표창, 우리말 교육, 바자회	751	284,429
지도자 및 회원 연수	시민의식 강좌, 시민의식 교육	749	45,704
국민통합운동	농촌일손돕기, 각종 봉사활동	12,040	334,385
효운동	각종 시설 방문, 효문화 운동 실시, 예절 교육	2,005	56,152

(5) 단체의 성과와 성공요인

- 선진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 외에 시민의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한 시민의식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및 캠페인을 집중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선진시민의식의 생활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은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전국 규모의 체계화된 운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에서 일심 단결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음

(6) 단체의 새로운 방향(중장기 발전 전략)

- 새로운 비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성격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트레이드마크 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함으로써 바르게살기의 고유한 설립 이념과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21C형 신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함

- 다만, 단체의 정체성에 적합한 사업 위주로 사업 대상 범위를 적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 강구 필요
 -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고 역동적인 조직 구성 작업 필요. 특히 청년조직과의 연계 활동과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 요망됨
- 신규사업 방향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
 - 전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및 연수사업
 -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목표 구현의 구체적 과제 선정 및 실천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제의 개발 및 실천

3. 한국자유총연맹

(1) 설립 목적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 (대한민국 정통성과 국가안보 수호)
-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력 증진
- 세계 자유 우방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2) 설립 배경

- 동구 공산권 붕괴와 탈냉전의 시대조류에 맞추어 ‘한국반공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재출범
- 법적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설립

- 문화공보부(89. 12. 30) → 공보처(98. 2. 28) → 문화관광부 (99. 5. 24) →
현재 행정안전부를 주무 감독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3) 주요 사업

- 자유수호 범국민운동
 -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과 여론 환기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이익을 위한 운동 전개
- 애국심고취 활동
 - 성숙한 자유민주시민의 육성 및 건전한 통일관 정립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병영체험, 문화 및 전적지 순례활동
- 국민통합과 자원봉사 활동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보호의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 홍보/출판사업
 - 상시 홍보활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 밝은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올바른 여론 주도
- 국제활동
 -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활동
 - 저개발국 빈민구호 및 피해복구 사업 지원

(4) 주요 사업실적

- 자유민주가치 홍보활동

- ① 자유마당 발행
- ② KFF 뉴스 발행
- ③ 연맹이미지 개선 홍보활동
- ④ 연맹정보화추진
- 선진 국민의식 선도활동
 - ① 제49회 전국자유수호옹변대회
 - ② 6·25 청소년 독후감대회
 - ③ 민주시민교육 학술연구활동
- 국민통합 및 자원봉사활동
 - ① 대외협력 운영 관리
 - 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 ③ 캄보디아 대학생 장학금 지급
- 자유수호활동 조직지원
 - ① 조직운영관리
 - ② 자유수호활동지원
 - ③ 전국 한마음등반대회
 - ④ 글로벌리더연합활동관리
 - ⑤ 글로벌리더연합 해외파견
 - ⑥ 직능단체 정기간담회
- 자유 민주시민의식 함양
 - ①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운영
 - ② 전국 청소년 자유민주의식 토론대회
 - ③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의식함양 캠페인
 - ④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

- 따뜻한 자유구현
 - ① 애국심 고취사업
 - ②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 ③ 동네행복지킴이 운영
 - ④ 나라사랑 평화나눔 대학생 DMZ 대장정

(5) 단체의 성과와 성공요인

- 민간 반공기구로 출범해 탈냉전 민주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9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화. 단체의 정체성에 적합한 사업 범위를 설정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각하고 있음
 - 정부의존형 관변단체 → 자율적 공익 시민단체
 - 극우보수의 이념단체 → 남북화해협력을 수용하는 개혁적 보수단체
 - 폐쇄적 준정부단체 →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제단체
 - 배타적 반공단체 → 전국 조직의 지역 봉사단체
- 남북교류/화해협력사업 선도
 -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수용
 -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지원사업의 강화
 - 민간 수준의 대북지원 확대 (대북 비료지원 기금 전달, 용천역 폭발 사고 북한주민돕기 성금 모금 등)
- 민주시민교육 활동 강화
 -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통일준비 교원 연수 등)
 - 남북교원 통일교육연구회 구성(연구 및 학술활동, 청소년 통일교육사업)
 - With 시민대학 운영(자유아카데미, 스피치훈련 기초과정, 토론기법 훈련과정)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강화 (진보적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통일교육책자 발간)
- Global NGO 단체로 발돋움
 - UN과의 협력 강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로서의 국제 봉사활동 전개)
 - KFF 글로벌봉사단 해외파견 봉사(2000년 이후 매년 개도국 해외 원조봉사)
 -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아태자유민주연맹(APLFD)의 집행위원국으로서 국제평화 및 외교·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봉사단체 위상 구축
 - 전국 조직망을 통해 독거노인 봉사활동, 장애우 지킴이 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전개
 - 2004년 전국 단위의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을 발족, 사회안전망 구축 기여
- 성공요인
 - 재정 자립화를 위한 수익모델 창출 : 한전산업개발 경영권 인수로 자립기반 강화, 각 지역단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 개발에 집중
 - 자율적 시민단체로의 조직 개편 : 회원 회비를 통한 조직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수탁, 지역의 재정자립화를 도모. 60만 회원조직을 150만 조직으로 확대하여 기간조직 외에 여러 직능조직과 해외조직을 확대
 -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고 역동적인 조직 구성 작업강화 : 대학생조직을 지역단위로 구성하여 청년조직과 연계 활동,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접목

- 온라인의 안보 놀이 공간 마련 : 대학생 및 청소년 등이 만들고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국 또는 토론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안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 지역 문화리더와 오피니언 리더 등 전문분야별 리더를 양성하여 사업의 주체자로 참여시켜 자신감 있는 활동전개

(6) 단체의 새로운 방향(중장기 발전 전략)

-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단체’로서의 ‘지도적 위상’ 정립과 대국민 생활공감형 이슈를 발굴, 국가와 국민들의 귀감이 되는 단체로 성장
- 발전을 위한 추진방법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 구축과 내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 조직관리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과 외연 확장
 - 안정적 재원확보에 따른 활동 자원 확대